

국힘,李大統領 ‘망국적 부동산’ 언급에 “죽보 없는 호통경제학” 직격

장동혁 “李 집부터 팔라... 국민 협박 말고 대책 필요”

송언석 “국민 불안·불신만 키워... 시장에 공포 조장”

이재명 대통령이 X 경제를 통해 ‘망국적 부동산’ 등을 운운하며 연일 다주택자를 상대로 경고장을 날리는 데 대해 2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집값이 안 잡혀서 분노조절이 안 되는 모양”이라며 “국민 탓하기 전에 본인부터 돌아보라”고 일갈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보유한 분당 아파트가 1년새 무려 6억여원이 올랐다고 해서 이같이 비판했다.”

장 대표는 특히 “(이 대통령이) 인연 국회의원이 되면서 2022년부터 판다치로 아직도 팔지 않고 있다”며 “4년째 못 팔았잖아 못 판 게 아니라 안 판 것”이라고 비판

을 이어갔다.

특히 “이미 4년째 실거주하지 않았고, 앞으로 4년 이상 실거주를 못 할 것 같다. 대통령 논리대로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장 팔아야 하지 않겠냐”면서 “대통령부터 훌륭한 한 채를 쥐고 버티는 것처럼 보이니 무슨 정책을 내도 약발이 먹일 리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속 정비보다 부동산 잡는 게 쉽다”며 “국회도 ‘국회 부동산’을 왜 못 잡았냐”라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말은 그 자체로 정책이다. 말의 무게가 다

를 수밖에 없다”며 “SNS는 소문의 공간이지 국민을 협박하는 곳이 아니다. 분노조절하고 이성적인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종과유에 종료를 두고 시장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며 “민간한 부동산 문제를 즉속적인 SNS로 다루는 모습은 정책 토론이 아니라 시장을 향한 협박”이라고 개세했다.

이어 그는 “시장은 명령으로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과 신뢰로 인정되는 체계”라며 “호통 경제학에 이어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죽보 없는 말을 되뇌면서 협박·호통 경제학을 전파하는 건 국민 불안과 불신만 키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미 예정된 세제 일정

을 놓고 시장 협박을 계속하는 것은 시장에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한다”며 “자칫 가짜 변동성을 키워 자산까지 하락과 금융 불안으로 이어지는 체계적 위험을 증폭시킬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법과 제도, 일관된 로드맵으로 신뢰성을 관리해야 할 시장을 대통령이 직접 SNS로 압박하는 행태 자체가 문제”라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 인사들의 내로남불(도 문제)”이라며 “정권 핵심인사 상당수가 강남 한강 벨트에 고가 주택을 갖고 있고 이중 10여명은 다주택자”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가 5000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며 다주택

자를 성토하는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연이어 쏟아냈다.

실제 지난 1월31일 오전에는 “거의 모든 때 잠으시잖아...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을 뿐 알게 될 것”이라며 ‘양도세 종과세’로 압박하는가 하면 같은 날 자정 무렵에는 “계속정비나 주가 5000 달성처럼...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발인’ 비판에 직접 반박했다.

또한 전날에는 “부동산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걸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드느냐”라며 “(다주택 종과세)유예가 아까움 어언 4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에 종료 시장을 ‘2026년 5월9일’로 거듭 못 보면서 “제도만 필요하면 바꿀 수도 있는 것”이라며 “아직 100일이나 남았다”고 주장했다.

이영만 기자 joy@siminibo.co.kr

“합당 밀약 없다... 우당 멋대로 활용 말라”

조국 “민주당 결론내야” 경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문제와 관련, “내란을 함께 극복한 동지이자 이재명 정부를 세운 우당(友黨)인 조국혁신당을 제2당으로 활용해서 안 된다”라며 민주당에 경고했다.

조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내부 논쟁이 격렬한데 비전과 정책을 놓고 벌어지는 생신적 논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와 조국혁신당을 향해 온갖 공격이 전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그러는지 논쟁은 국민이러면 사실 것이다. 저는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있다”며 “합당에 대한 의견은 다를 수 있다. 제안을 한 민주당 안에서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조국혁신당을 공격한다고 해서 민주당 내부 문제가 해결되는 않는다”라며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히지만 ‘밀약’이 없는 것이다. 합당 논의는 지금 빠지 한 장을 펼쳐보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을, 언제, 어떻게 그럴지는 앞으로 투당이 합의해야 한다”며 “저는 조국혁신당의 집단지성과 민주당원의 집단지성이 생산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방향으로 작동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영진 원내대표도 이날 이 자

리에서 “합당을 둘러싼 근거 없는 음모와 비난, 심지어 색깔론까지 동원한 공세는 이제 그만 거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합당을 제안한 집권여당에게 질서있는 내부 토론과 개혁을 위한 우당과의 연대 정신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민주당 정경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와 관련, 당내 일각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저는 당 대표로서 합당 제안을 한 것이지, 합당을 결정하거나 합당을 선언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당인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옛날 제왕적 총재 시절에는 총재 1인이 합당을 결정하고 선언했는데 지금은 총재가 합당을 결정하거나 선언할 수 있는 폐쇄적·수직적 정당이 아니다”라며 “합당 문제든, 무슨 문제든 민주당의 운명은 당의 주인인 당원이 결정한다”고 말했다.

또 “통합은 힘을 합치자는 것이고 분열은 힘을 빼자는 것”이라며 “(혁신당과)보편한 채 선거를 치르는 것보다 통합해 선거를 치르는 것이 한나라도 이익이고 승리의 가능성을 높인다. 다 함께 힘을 모아 싸워도 힘든 싸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다 함께 통합해서 힘을 모아 싸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용학 기자 dra@siminibo.co.kr

민주당 “2월 국회서 대미투자특별법·민생법안 신속 처리할 것”

장동혁 “핵심 개혁 현안들 매듭”

한병도 “국힘, 조건 없이 협조할 것”

더불어민주당 장동혁 대표가 2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흔들림 없이 현안에 안착할 수 있도록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행정통합을 비롯해 사회개혁, 3차 상법 개정 등 국민에게 오래 기다려 온 핵심 개혁 현안들을 매듭짓는 결단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스피가 지난해 5200을 훌쩍 넘어서 가운데 여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월 수출 실적 결과와 수출액이 659억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1월 중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반도체와 자동차가 주도한 이 압도적인 기세를 이어가면서 우리에게는 관세 불확실성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설 명절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각 상임위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라며 “민주당은 오직 민생을 최우선으로 둔다. 성과로 말하고 결과로 책임지는 민주당, 국민과 끝까지 함께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장강 평평 더불어민주당 정책대 대표(왼쪽)와 이영주 최고위원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의 도중 언론을 표정하고 있다.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의를 둘러싸고 강한 의견을 표명했다. /연합뉴스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2월 국회를 민생 국회, 개혁 국회로 만들겠다”며 “민주당은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2월 국회에서 ‘민생 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9일 국회는 90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지만 여전히 80여건이 본회의에 계류해 있다”며 “민주당은 남은 입법 과제를 조속히 처리하겠다. 아울러 행정통합특별법안 등 개혁 입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관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러르나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고 돌아왔다. 장관은 ‘상호 간 이해가 깊어졌다’고 밝히고 미국측은 대미투자특별법이 개류 중인 부분에 아쉬움을 표했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통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조건 없이 협조할 것”이라며 “2월에는 ‘밀약’을 함께 만들어 나가길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전용학 기자 dra@siminibo.co.kr

‘한동훈 제명’ 장동혁, 지방선거 총력전... 중도·외연 확장 본격화

張, 5·6일 제주도행... ‘협치’ 호남도 방문 검토

인재영입위원장 ‘조정훈’... 23일 새 당명 결정

국민의힘이 2일 인재영입위원장을 조정훈(서울 마포구) 의원을 임명하는 등 6.3 지방선거 준비에 본격 돌입하는 모습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조정훈 의원은 수도권 재선으로 중도·외연 확장에 크게 도움이 되는 인물”이라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가장 우선적인 중도·외연 확장책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의원이 새로운 인물들을 계속 총원하면서 미래로 나아가는 국민의힘 모습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내면서 이같이 밝혔다.

세제은행(WB) 출신으로 당내 가장 유망한 중도·외연 확장책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국회, ‘정교유학 방지법’ 추진

한교총 “신앙 자유 침해” 비판

최근 국회에서 정교유학 방지법을 위한 법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가 2일 “정교유학방지법”과 맞물려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교유학 방지법 추진을 우려가 있는 법 제정 시도를 재고하라고”고 비판했다.

한교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정교분리 원칙의 확립’과 신전지, 통일교 등 ‘반사회적 종교

집단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라는 국정 기조에 원천적으로 동감한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려는 이런 정책이 일부 국회의원의 사정하에 ‘차별금지법’, ‘정교유학방지법’과 맞물려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교유학 방지법 추진 시도를 재고해야 한다”며 “그리고 반사회적 종교와 정교유학을 구분할 수 있는 정교분리라는 포괄적 기준으로 정부가 종교전체를 단단히하는 우려를 표시하라고”고 강조했다.

한교총은 “법안이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은 상호 비판적 지적 관

계 속에서 서로 독립을 보장하려는 의미를 지닌다”라며 “정치는 종교에 간섭해서 안 되며 종교가 정치와 같이 권력 다툼의 장에 휘말려선 안 된다. 정치는 종교의 선한 영향력을 인정해야 하고 종교는 국적이 선택한 정치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이런 법의 제정은 기존 확립된 법질서를 존중하는 바를 위해서 이뤄져야 하며 새로운 법으로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려는 법 만능주의의 거센 안 된다”며 “특히 종교단체에 일반

적으로 적용되는 민법에 표현된 ‘정교분리’의 위반이라는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한 기준으로 종교집단을 해산하고 그 재산을 몰수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시도하는 건 과유불급의 재”라고 지적했다.

한교총은 “한국교회는 1000만 성도들과 함께 대한민국에 헌정된 가치를 수호하고 다음 세대에 건강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숭고한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만 기자 joy@siminibo.co.kr

국방인공지능법 제정안 공동 발의

유용원·부승찬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국방 인공지능법을 제정·총안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다루어 한다는 초당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방 분야 인공지능(AI)의 체계적 발전과 책임 있는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방인공지능법 제정안’을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은 국방 분야 인공지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국내 최초의 법 제정안으로, 국방 인공지능의 개발, 운영·안전관리 전반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화하기 위한 첫 제정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국방인공지능법 제정안은 규제를 최소화하고, 국방 인공지능의 연구·개발과 활용을 촉진시키는 방식이 아닌, 국방의 특수성을 고려해 안전하고 책임 있는 활용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원칙과 관리 기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술 발전을 막는 규제법이 아닌 국방 인공지능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기반 법률이라는 점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다.

아울러 법안에는 국방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활용’을 기본 원칙으로 명시해 AI의 군사적 활용과 관련한 제반되는 윤리적 우려와 윤리성 위험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담았다.

이영진 기자 yyj@siminibo.co.kr